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8. 9. 1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 해 축구장 190개 숲 ‘태양광 광풍’에 사라져...
폐패널은 두달째 방치 (‘18. 9. 13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경제성·효율성이 높은 원전은 확대하고 태양광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속도전으로 부양시키고 있음
 -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마구잡이 허가에 부실 공사, 환경 훼손, 주민 반발이 확대되고 있음
- 현행법상 폐패널은 생활폐기물도, 사업장폐기물도 아니어서 처리방도가 없기 때문에, 경북 청도군에 발생한 폐패널이 두 달째 방치
 - 폐패널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데도, 아직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

2.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

- ①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**탈원전과 무관**하게,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왔던 정책임
 - 지난 14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**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**를 기존 0.7에서 용량에 따라 **최대 1.2까지 상향조정**
- ② ‘준비 안 된 정책’을 밀어붙여 부실공사, 환경 훼손 등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- **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**(‘17.12)은 처음부터 **환경성을 고려한** 재생에너지 확산 계획이며,
 - * 국내 태양광 보급잠재량은 약 113GW(예기평 등 분석)이며, 이중 산지는 14GW(전체의 12.8%)로서 산지훼손 없이도 ‘30년 목표인 30.8GW 달성가능
- ‘태양광·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**부작용 해소대책**(‘18.5)’을 발표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 노력
 - *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, 임야 REC가중치 하향조정(최대 1.2 → 0.7) 등

- ③ 보도된 산림청 산지 태양광 시설점검(‘18.7)은 **부실시공 등이 우려되는 시설들을 선별**하여 시행한 것으로, 산지 태양광 전체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 - 에너지공단 등이 진행한 점검결과*(‘18.8)에 따르면, 산지 태양광 **63개소 중 10개소(16%)**에 시설관리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판정
 - * ‘10년 이상된 태양광 발전소’ 전체를 대상(에너지공단, 에너지안전공사)
- 시설조치 유형별 : (지지대 부식) 7개소, (경계구조물 없음) 3개소 등
- ④ 태양광 폐모듈이 사업장폐기물 등이 아니어서 **현행법상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** 주장은 사실과 다름
 -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모듈 관리에 대한 설명자료를 기재포한 바 있음(‘18.9.5)
 - 한편, 폐모듈 재활용 기술 연구 및 폐모듈 재활용 공정 구축을 위해 ‘16년부터 ‘**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**’ 사업을 추진 중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경호 과장(044-203-5360)
조우신 사무관(044-203-5358)
이기현 사무관(044-203-5362)